

순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개발 대신 '생태수도'로 통했다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성과...광양시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회장 수상

순천시가 '2015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순천시는 5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선정되고 9월에는 문화건강센터 건설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는 등 경사가 이어졌다.

개발 압력 속에서 순천만과 그 생태를 보존해내고, 이를 '국가정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엮어낸 성과가 대내외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전남 각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은 14일 강원

도 강릉시청에서 열리는 '제9회 도시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 최막중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난 1년간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자원체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를 측정한다.

대통령상을 받는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를 도시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전체 생태자원을 순천만을 이용, 모든 시정을 생태적으로 특성화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 명단에는 광양시도 포함됐

다. 광양시는 도시경제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회장상을 수상한다.

국무총리상은 산후조리와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증가 정책과 귀농·귀촌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었다는 점 등이 좋게 평가된 부산시 기장군이 받는다. 그 외에 강릉시, 서울시 영등포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 장관상,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회장상, 국토연구원장상 등을 받는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고유성을 살려 성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15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순천시의 순천만 정원(복합림화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롯데쇼핑 부당이익' 1면에서 계속

재임대 면적은 최초 파악한 2012년 1만 781㎡에서 매년 늘고 있다. 재임대의 경우 시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주)은 입찰 당시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각서에는 '시의 승인없이 대부분 재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는 대부분 받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남에게 재임대 할 수 없게 돼 있다. 롯데쇼핑(주)은 또 연매출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직영매장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계약서 상 대부분 재임상은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을 때만 가능하게 돼 있다.

개장 첫해인 2007년 1025억원인 매출액은 2010년 1657억원, 2012년 2202억원까지 치솟았으나 2013년 1896억원, 지난해 1804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시는 2013년 9월, 재협상을 한다면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전담팀(TF)까지 꾸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협상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도, 롯데쇼핑측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 나주 AI 점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나주시를 방문해 AI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나주시는 지난 9월 14일 강진과 함께 오리농장에서 AI(H5N8)가 처음 확인되었던 곳으로 그 이후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3개 시·군에서 5건의 AI가 검출된 바 있다.

이 장관은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오리 농장 일제검사 등 방역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수부 "광양항 '투포트 정책' 변함없다"

〈복합물류항만 육성〉

황주홍 의원에 서면답변

해양수산부가 '광양항을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한다'는 투포트(Two-Port) 정책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13일 해양수산부는 황 의원에 서면답변을 제출해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양항정책의 일환으로, 광양항을 컨테이너를 포함한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광양항과 부산항을 두 톱으로 하는 이른바 '투포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명박정부 들어 '흔들린다', 심지어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장관마다 입장차가 있었다"며 "초대 윤진숙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투 포트 정책의 폐기

를 가정사실화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주영 전 장관은 정부의 투포트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취임 첫 방문지로 광양항을 선택해 지역민들이 광양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기준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의원은 "이러한 배경 속에 해수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내

년도 정부 예산에 광양항 24억 크레인 관련 예산이 누락됐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중앙정부, 재정난 지자체 직접 개입

녹조 예방 하천까지 확대

예산 편성 제한·회생 지원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

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을 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 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녹조 현상 등 조류(藻類·식물플랑크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의 대상을 현행 호수·저수지에서 하천까지 확대한다. 수질검사를 위탁받은 협회·기관의 임직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대강 등 주요 하천에 여름철 녹조 현상이 반복해 발생함에 따라 조류 피해 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했다. 녹조가 대량 발생할 경우 하천에도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어 낙동강 등 하천분류 취·정수장의 조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등의 임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보고 해당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적용 대상은 수위·사전수위, 제3차 뇌물제공, 수위 후 부정저수, 사후수위, 알선수위 등이다.

바다분수, 인공폭포 등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 등 시설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은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가인하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통상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노벨경제학상에 영국 영거스 디턴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인 영거스 디턴(69)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디턴 교수의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을 기려 그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관 한손 노벨위원장은 "복지를 증진시키고 빈곤을 줄일 경제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소비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며 "디턴 교수는 누구보다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영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 중인 디턴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소비자 수 모 델과 영국으로의 적용'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

한평생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일신종합건설(주) 이재관 회장님께서

2015년 10월 13일 새벽 2시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 상 주: 이관행, 강옥애
- 손 자: 이준형
- 손 녀: 이서정
- 빈 소: 조대병원 장례식장 2층 제1분향소
- 발 인: 2015년 10월 15일 09시
- 장 지: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선영
- 연 락 처: 062-236-1110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